



올 하반기 쌀대란 우려와 국내 쌀 시장 안정을 위한 한농연 요구사항

현재 국내 쌀 시장은 날로 증가하는 재고량과 쌀 협상 국회비준 등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또한 정부는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추곡수매제를 성급하게 폐지하고 실효성 없는 소득보전직불제를 제시하여 350만 농민의 반발을 불러왔다.

이에 많은 일선 농가들은 올 하반기 급격한 쌀 가격 하락과 농가판로 상실로 인한 쌀대란을 걱정하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국내 쌀 산업 현황, 정부 대책, 2005년 수확기예상 등을 통해 하반기 쌀대란 우려를 점검하고 국내 쌀시장 안정을 위한 한농연 요구사항을 알아보고자 한다.

I 쌀 산업 현황

최근 10년간 최소시장접근(MMA) 방식으로 수입된 쌀은 모두 115만4,000여t에 달한다. 정부는 국민 정서를 감안해 수입쌀을 가공용으로만 쓰이도록 관리, 쌀 가공업체에 저가로 공급하고 있지만 소비에 한계를 보이면서 현재 수입량의 절반이 재고로 남아있다. 2004년 10월 말 현재 수입쌀의 재고량은 340만섬(49만t)으로 전체 쌀 재고량 710만섬의 47.9%를 차지하고 있다. 수입쌀이 전체 쌀 재고 증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셈이다.

수입쌀의 보관에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쌀 100만섬을 보관하는 데 보관료와 금융비용(연리 6% 기준) 등으로 연간 450억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40만섬의 재고관리에만 연간 1,500억원 정도의 재정이 필요하다 보니 농정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해 20만5,000t의 쌀을 수입하는 데 들인 돈은 9,100만달러(920억원)였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셈이다.

현재 현미 상태의 수입쌀을 보관할 수 있는 특급 및 1급 창고의 저장능력은 26만4500t이지만 수입쌀 재고량은 이를 초과하는 등 보관 여력 역시 충분치 않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상당량이 보관 여건이 미비한 창고에 보관되고, 오래된 쌀에는 변질을 막기 위해 독성이 강한 살충제가 뿌려지고 있다.

이처럼 재고 물량이 급증하면서 창고 업자들은 수입쌀 보관에 따른 수익이 커 보관물량 확보에 경쟁이 벌어질 정도다. 수입쌀은 1t당 하루 49.5~166.7원의 보관료를 지불하고 전국의 5,700여개 정부양곡창고에 산재해 있다.

II 정부 양곡정책 부재 및 문제점

○ 국내 쌀산업 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양정제도 개편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추곡수매제가 폐지되어 농협과 민간이 쌀을 구입할 때 참조 및 지

지 가격이 사라져 산지 쌀값이 더욱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매년 200만석이 넘는 물량이 수확기 중 민간 시장에 추가로 유입되거나 농협이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공공비축 물량을 각 지역 내 시가로 매입하게 될 경우 지역 간 가격차로 인하여 소득불균형도 우려된다. 이 때문에 농협이나 민간 RPC의 쌀값과 수매량을 결정할 때 큰 어려움이 예상되며 정부·농협과 농민의 마찰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 쌀소득보전직불제 등 소득보전 대책이 미흡

정부는 목표가격을 170,070원/80kg으로 정하고 쌀값이 하락하면 그 차액의 85%를 보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쌀소득보전직불제는 기존 논농업직불제와 추곡수매제 효과와 비슷한 수준이며 생산비와 물가상승률 전망치가 반영되지 않고 있어 매우 미흡한 대책이다.

특히 ha당 약 60만원의 고정직불금은 주요 농업선진국들이 ha당 100만원 이상을 보장해주는 현실과 비교했을 때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실제 농협조사연구소는 재고량 증가에 따라 향후 농가수취소득은 2004년 762만원에서 2014년 514만원으로 33% 급격하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 쌀산업 핵심 기반시설 미곡종합처리장 (RPC)의 한계 및 도산 우려

현재 재고량과 쌀값의 계절진폭의 관계를 보면 7백만~8백만석의 재고량에서는 제한적으로 2~5%의 계절진폭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재고량이 1천만석을 넘어서면 계절진폭은 더욱 미약하게 나타나고 이는 민간 RPC 경영부담에 직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도 농협 RPC등은 과중한 재고와 미약한 계절진폭으로 만성적인 경영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특히 민간도정업자들은 수확기 물량 흡수보다는 값싼 정부의 공매에 의존하여 생산비를 낮추다보니 농협 RPC의 경영적자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농협 RPC에 근무하는 수매 담당자는 “이미 농협이 정부를 대신해 수확기 가격폭락을 방지하는 것은 한계에 도달해 있다”고 밝히면서 “농협RPC 재고량이 현재 360만석인데 정부가 공매 계획(200만석)을 세우고 있어 수확기까지 물량을 소진하고도 120만석은 재고로 남게 되어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III 2005년 하반기 쌀시장 전망

○수급 전망

올 하반기 생산량과 재고량을 합친 공급량은 4,339만석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수요량을 보면 소비는 계속 줄어드는 추세이다. 이는 1인당 연간 소비량이 1995년의 106.5kg에서 2004년에는 82.0kg으로 연평균 2.9%씩 감소해 온데 기인한다.

이와 같은 공급량과 수요량에 따라 2005년 말 연말재고는 1천 61만석으로서 별도의 조치가 없는 한 가격과동을 겪었던 2002양곡년도보다 더 늘어날 전망이다.

생산량을 소비량으로 나눈 자급률을 보면 생산이 크게 줄었던 1996년 양곡년도 89.9%보다 대폭 늘어난 105.9%를 보일 전망이다.

○가격 전망

2005년산 쌀의 수확기 가격은 2005년말 재고량 수준과 생산량 등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만약 올 하반기 예상 재고량이 150만톤을 넘고, 생산량마저 490만톤을 상회하면 최악의 경우 80kg당 쌀값이 14만 7천원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2005년 수확기 가격 전망

단위 : 천원/80kg

생산(2005) 재고량(2005)	475만톤	480만톤	485만톤	490만톤
130만톤	157~162	155~160	153~158	151~156
140만톤	155~160	153~158	151~156	149~154
150만톤	153~158	151~156	149~154	147~152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장 농민 의견과 정부의 입장

정부는 한농연 등 주요 농민단체의 하반기 쌀 대란 우려에 대해 큰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농림부 식량정책국 관계자는 “올 연말 시행하게 될 공공비축제는 300만석으로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고 “수확기 미흡수 물량에 대해서도 농협 RPC의 매입 물량을 증가 시켜 해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한 쌀 가격 하락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도 “현재 정부가 발표한 쌀보전보전기금법에 목표 가격을 설정하고 하락분에 대해서는 85%를 정부에서 보전하기로 하여 농가소득 하락은 미미하거나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그러나 지역 현장에서 직접 농사를 짓고 있는 현장 농민의 반응은 냉담했다. 충남 금산에서 20년째 벼 농사를 짓고 있는 길민석(43세.농업)씨는 “현재 수확기 물량 흡수와 가격지지를 담당했던 추곡수매제가 성급하게 폐지함에 따라 당장 하반기 판로와 급격한 쌀 가격 하락이 우려된다”고 말하면서, “농협RPC 담당자들도 올 하반기 쌀 재고 물량으로 작년보다 더 많은 수매는 불가피하다”며 하반기 쌀대란을 걱정하고 있다.

IV | 국내 쌀시장 안정을 위한 한농연 요구사항

1. 쌀 재고 처리

○ 매년 300만석 이상 대북 쌀 지원을 실시하여 남북농업교류를 활성화해야 함

쌀 재고 과잉으로 쌀값 폭락과 관리비용 증대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남북 관계가 진전되어 식량지원에 대한 대국민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어 있고 남북통일 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하고 있는 만큼 매년 쌀 300만석 이상을 대북 지원하여 남북농업교류를 활성화해야 한다.

○ 생산기반은 유지하고 쌀 재고 과잉을 막을 수 있는 대체작목 육성 보급

향후 쌀 재고 과잉은 많은 문제점을 야기 할 수 있으나 통일시대에 대비해야 하는 우리나라 농업 여건상 논 기반을 줄이는 것은 큰 모험이다. 이에 논외 기반은 유지하면서 논외 지력(논

콩), 경관(접시꽃), 식량 자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대체 작목을 육성·보급해야한다.

2. 농가소득안정망 구축

○ 소득보전직불제의 고정직불금을 ha당 130만원으로 인상해야 함

고정직불금 인상은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할 수 있고 탄력적 생산조정제 등 정책기조 전환에 유리하다. 이에 쌀값 하락과 농가소득 감소를 막고 농가소득이 안정되도록 고정직불금을 ha당 130만원으로 인상해야한다.

○ 발농업직불제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전면 실시해야 함

현재 발농업직불제는 조건불리지역직불제 형태의 시범사업으로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중이다. 그러나 농업 개방 이후 가장 피해를 본 작목은 발작물이다. 또한 향후 벼 재배면적이 줄어 발작물로 작목전환이 이루어질 경우, 추가적인 가격하락도 우려된다. 이에 발농업직불제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여 추가적인 농가소득 하락을 막아야 한다.

3. 수급안정과 양곡정책수립

○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부 수매곡 관리 필요

정부는 민간업자의 단경기 원료곡 확보 가능성을 약화시키고 수확기에 매입량 확보를 유도하기 위해 효율적인 정부 수매곡 관리 계획을 세워야한다. 따라서, 쌀시장의 계절진폭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과 농가판매가격을 관리하기 위해 정부 수매곡 25만톤 시장 격리가 필요하다. 단, 무조건 시장방출을 중단 할 수 없으므로 공매 계획시 정부, 농민단체, RPC관계자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수급을 조절해야한다.

○ 공공비축재 물량을 확대하고 지역 간 가격차 극복을 위한 대책을 시행해야 함

그동안 수확기 물량 흡수 기능을 담당했던 추곡수매제가 폐지되고 공공비축제가 도입됨에 따라 수확기 홍수출하로 인한 수급 불균형 등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시가로 수매하게 될 경우 지역 간 수매가격 차이로 인한 소득 불균형도 우려된다. 이에 공공비축 목표를 1천만석 수준으로 늘려 매년 5백만석씩 수매하고 지역 간 가격 차이를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4. 중장기적 쌀 산업 종합대책 수립

○ 쌀의 민간 유통기능 활성화, 쌀 생산비 인하 정책이 추진되어야 함

RPC 운영 비효율과 RPC간 출혈경쟁, 마케팅 능력 부족은 쌀 산업 발전에 큰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RPC 효율화, 현대화, 규모화 등 민간 유통기능의 활성화가 이뤄져야한다.

또한 농자재 값 인상 등 쌀 생산비는 매년 인상되어 쌀 농가 수익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으며 농자재 값의 비중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특히 화학비료 보조 정책이 폐지됨에 따라 생산비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쌀 생산비 인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한다.

○ '우리 농산물 사용'을 명시한 학교급식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함

현재 학교급식에서 안전성이 담보되지 못한 저가의 외국농산물 등 수입산 식재료의 사용이 50%에 육박하고 있다. 또한 농민들도 농산물 수입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국내 농산물의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안정적인 영농활동에도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

이에 국민건강권 확보와 농가소득안정 차원에서 '우리농산물 사용'을 명시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한다.